전략노트
Notes on Strategy

2021-9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일본의 '세간(世間) 정치'가 보인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협력실장)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일본의 '세간(世間) 정치'가 보인다

김숙현 (대외협력실장)

일본의 역사학자 아베 긴야(阿部謹也)의 저서 가운데, 『世間とは何か』(講談社現代親書,1995)(세간이란 무엇인가)가 있다. 이 책에서는 세간(世間)의 개념에 대해 '불교에서는 '속세'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社會)'와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나 비교적 협소한 교제의 범위'를 지칭한다고 설명한다. 아베 긴야는 "실제로 세간의 실체는 상당히 협소하고, '사회'의 범주와는 차별화된다. 또한 세간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 이와 같이 세간은 배타적이며, 엄밀히 말하자면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세간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바로 '협소함', '배타주의'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내 반대 여론과 시민사회의 70%가 넘는 강한 반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결정했다. 그것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이른바 일본의 협소하고 배타적인 '세간 정치'의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바다는 일본만의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일본 국내의 어업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인간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자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 및 해양으로 연결되는 전 세계의 안전과도 무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일본 국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일본 내에서 그것도 협소한 '세간'에서 결정하고 발표할 문제가 아니다.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가 담겨있는 물탱크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은 일본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국내 문제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문제는 일본 영해의 문제에 국한될 수 없으니 국제 문제인 것이다. 적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그들끼리 결정하기 이전에 일본 국내 어업종사자 및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고, 나아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오염수 방출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했다. 더 나아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오염수 방출 문제를 공론화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위해 협력한 이후에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세간 정치로는 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되기 어렵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된 후 후쿠시마 원전 처리 문제는 일본의 뼈아픈 상처였다. 후쿠시마 및 주변 지역의 수산물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에서도 수입을 금하고 있고, 후쿠시마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방사능 노출 위험으로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등, 지진 발생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제대로 정리되거나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작년 7월 24일에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었겠지만, 1년 연기하여 개최될 올해에도 사실상 무관중 올림픽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도쿄올림픽을 안전하고 깨끗한, 그리고 후쿠시마의 상처를 극복하고 부흥시키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은 이미 무산되었고 일본 내 코로나19 극복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과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한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로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가이다. 일본 정부는 악화된 한일 관계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최대 피해국일 수 있는 한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였다. 그야말로 협소하면서도 정책 결정자 스스로가 '사회'라고 착각하는 '세간'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일본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와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가치로, 한국에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을 준수하라며 대응 논리로 삼아왔다. 일본 국내의 70%가 넘는 반대 여론과 일본 내 바다 방류 반대에 서명한 42만 명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처사가 과연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한 방식인지 물어보고 싶다. 또한 주변국 및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어떠한 설득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태도인지 반문하고 싶다.

향후 2년이 일본의 미래 이미지를 결정할 것이다

실제 방류까지는 새로운 설비 건설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2년 후에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바다 방류를 반대하는 자국민과 오염수 방출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에 대해 정확한 정보는 물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설득 논리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역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을 것이다.

현재의 일본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국내 문제와 글로벌 이슈를 구분하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과, 미국 편향적 태도보다는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 나아가 협소한 그들만의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중대 사안을 밀실에서 결정하는 '세간 정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향후 2년간 일본 정부의 인식과 결정은 '세계 속 일본'이 될지, '세간 속 일본'이 될지를 결정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